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24명, 사망자는 역대 최다

01 주요 내용

- 통계청의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43만 8,700명이 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27만5700명인 것으로 집계(’16.2.24.)
 - 하루 평균 1,202명이 출생하고, 755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
- 합계출산율*은 1.24명,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3세
 -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내려가는 저출산이 시작됐고 그때 태어난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연령에 도달 하면서 출생아 자체가 감소
 - 만혼의 영향으로 30대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20대 이하의 출산율은 감소하여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3세로 전년보다 0.19세 높아짐
 -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1.90명), 전남(1.55명), 울산(1.49명) 순이며, 경기도는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임
- 사망자 수는 27만 57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3.0%) 증가, 사망원인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고령화로 70·80대 진입한 인구가 늘어난 탓
 - 남자 사망자 수는 70대(4만4000명)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80대(4만9000명)가 가장 많았음.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50대(50~59세)의 사망률 성비는 2.9배로 최대
-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는 1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4천700명(2.8%) 감소하여 2028년이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같아져 자연증가가 0명이 되고 2030년부터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생산력 약화,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 경기도는 인구 천 명당 9.2명이 출생하고 4.3명이 사망하여 세종·울산·서울·대전과 함께 인구 자연증가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속함



*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그림자료: 연합뉴스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시군간 출산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군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 조정회의” 를 구성·운영하여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저출산과 고령화를 특정 연령이 아닌 경기도 인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한편, 인구정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을 총괄하고 통일된 정책 추진을 위한 구성

2. 「서울시 청년 반값 월세 정책」 도입 · 추진

01 주요 내용

- 서울시는 낮은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 1인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최장 10년간 주변 월세 시세의 80%이하로 임대하는 정책을 발표
 - 원룸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축년수 20년 이상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면,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의 90%를 연 2%(만기 5년)의 저리로 사회투자기금에서 융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6년 상반기에는 13개 동(400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 중 30%는 청년 주거빈곤 가구에 반값월세(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우선 공급 예정임

입주가격 :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저소득층

모 집 : '16년 6월부터 SH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관리 · 감독 :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은 SH 공사에서 관리 · 감독

공급계획 : '16년 하반기 400실, 2017년부터 연간 2,000실 규모로 확대 공급

〈201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	3,714,515	4,947,762	5,393,154	5,475,403

청년 반값 월세(주변시세의 50%)는 지하나 옥상,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빈곤가구에 제공

- 청년 반값 월세 정책은 노후 고시원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보가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후속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건물의 노후도가 심한 도심 및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실제 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따복기숙사' , '따복주택' 외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신규 개발 및 건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기존의 도심 내 노후주택, 빈집, 고시원, 여관, 건물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이들을 '준주택 매입-리모델링사업-공급' 의 단계를 연계하는 정책 추진
-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정책적 기반 조성
 - 경기도 내 빈집, 건물 등 리모델링과 유자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대출보증 등 지원제도를 발굴지원
 - 청년주거협동조합 및 청년유니온, 민달팽이 등 청년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동브랜드 사업화, 공익광고 등 미디어 홍보, 대기업과 지역 사회적 법인을 연결해 주는 캠페인 등을 전개
-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발굴, 공급, 관리 등 공급주체와 수요주체를 연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주체들의 교육 · 컨설팅 · 인큐베이팅 등의 기능 수행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경기도 기대수명과 출산장려 정책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출생·사망(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합계출산율(TFR)은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3번째, 조사망률(CDR)은 4.3명으로 전국 16번째를 기록

- 2015년 경기도의 기대수명은 82.9세로 서울(83.6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
 - 성별 기대수명 차이는 전국에서 전남(8.3년)이 가장 크고 울산(5.1년)이 가장 적으며, 경기도민의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6년임(여자 85.7세, 남자 79.7세)

〈표 1〉 2015년 전국 시도별 기대수명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강원
기대수명	82.4	82.9	83.6	82.0	81.7	81.8	81.8	82.6	81.4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기대수명	82.0	82.0	81.7	82.0	81.3	81.8	81.6	81.6	82.8

*단위 : 세

- 도내 31개 시군 모두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2.1명)에 크게 미달하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1.85명), 가장 낮은 지역은 구리(1.06명)임
 - 지난 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출생아 수는 총 112,169명, 합계출산율은 1.241명임.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연천(1.85명), 화성(1.51명), 오산(1.50명) 순이며 구리시는 1.06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음

〈표 2〉 2014년 경기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시군	합계출산율	시군	합계출산율	시군	합계출산율	시군	합계출산율
수원	1.247	안산	1.185	의왕	1.225	광주	1.453
성남	1.114	고양	1.111	하남	1.094	양주	1.354
의정부	1.081	과천	1.121	용인	1.29	포천	1.196
안양	1.143	구리	1.055	파주	1.431	여주	1.354
부천	1.089	남양주	1.226	이천	1.387	연천	1.85
광명	1.17	오산	1.501	안성	1.371	가평	1.251
평택	1.435	시흥	1.237	김포	1.441	양평	1.294
동두천	1.293	군포	1.418	화성	1.512	경기	1.241

*단위 : 명

- 출산 장려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아이맘카페 설치·운영, 온마을 엄마품 시범사업 실시 등이며 시군별로도 자체적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도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음. 다만 지급대상에 있어 도내 18개 시군은 둘째년부터, 13개 시군은 셋째년부터 시군별 차이 존재
 - 일부 시군에서 출산축하용품 배부·신생아보험료 지원·산후조리 비용 지원·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등 이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격차와 사업 자체의 지속성 등에서 출산율 증가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미약한 편임

〈표 3〉 경기도 지자체 지원 출산장려제도 현황

출산장려 사업	시행 지자체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성남, 안양, 평택, 동두천,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김포,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수원, 의정부, 부천, 광명, 안산, 고양,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출산축하용품 배부	고양, 안양, 군포, 이천, 오산, 안성, 의왕, 과천, 연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연천, 포천, 김포, 셋째아 이상(부천, 양주)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수원, 용인, 안산
미혼자 성혼사업	수원, 과천
공공산후조리원	성남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파주, 여주

03 FACT CHECK

경기도의 낮은 고령화율은 출산율이 높기 때문?

- 경기도는 2015년 기준 고령화율 10.53으로 울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젊은 광역자치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3.15	12.6	14.65	12.71	10.69	11.3	10.9	8.79	10.6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53	16.89	14.82	16.42	17.84	20.53	17.75	13.79	13.76

- 경기도의 고령화율이 낮은 이유는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서울 등 타지역에서 이주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
 - 경기도 2015년 기준 합계출생율은 1.27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반면,
 - 순유입 인구는 9만 5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 연령층에 걸쳐 전입이 발생
 -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로 진입한 서울전출자는 35만9천명으로 이는 전세난 등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으로 이주한 때문
- 경기도는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정책과 출산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고령화율이 낮기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표면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 지불가능한 주택을 찾는 주택수요로 전(全)연령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시설, 사회복지인프라 등 신규유입인구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전개해야 함

04 통계로 보는 복지

2015년 경기도의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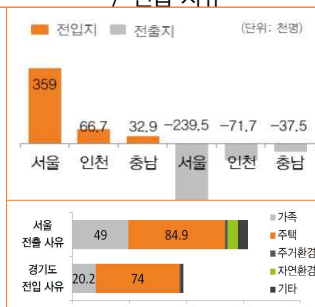
경기도의 전입/전출 및 순이동



경기도 연령별 전입자 수



경기도의 전입, 전출지 / 전입 사유



자료 : 통계청, 2015년 국내인구 이동통계

- 2015년 경기도의 전입자는 199만3천명, 전출자는 189만8천명으로 순이동은 9만5천명임
 - 연령별 전입자는 30대(2만8천700명)와 20대(2만2천6천명)가 높고, 10대가 가장 낮음
- 경기도 유입자의 55.6%인 35만9천명이 서울에서 전입하였으며, 인천이 10.3%(6만6천7백명), 충남이 5.1%(3만2천9백명)순이며, 전출지도 동일한 순서임
- 경기도 유입자(9만5천명)의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이 7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주거환경 순으로 전입한 것으로 조사

05 해외동향

2016년 미국 대선, 복지 정책의 향방은?

美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인, 3월 1일, '슈퍼 화요일'에서 민주당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을 보인 가운데,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보고자 함

*슈퍼 화요일 : 13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면서 전체 대의원의 25~30%가 결정

- 미국 유권자들은 2016년 미 대선에서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6 미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샌더스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혁명적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워싱턴 정치에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보수진영 “빠르게 진보화되는 미국” 이 불만	진보의 입장 “아직 변할 게 많다”
1) 진보 이슈의 합법화 : 낙태는 6년, 동성 간의 결혼은 2년만에 38개주에서 합법화. 최근 4개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등 빠르게 진보화되는 미국사회에 보수층이 반응	1) 의료정책 : 1인당 의료비 지출 8,713달러, 약 처방 지출은 1인당 1034.4달러로 OECD 국가 중 최고임에도 국가의 의료비 부담은 낮음
2)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분노 :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오바마 건강법, 이민법,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를 저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님	2) 교육정책 : 미국 전체인구의 12%가 학자금 보유, 총 학자금 대출액은 2015년 2분기 기준 1.2조달러로 멕시코의 GDP보다 높음
	3) 환경정책 :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불과(OECD 평균이 8.7%)

- 4년마다 치뤄지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주로 국내적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경향
 - 이민 문제와 임금정체, 가족계획, 과세, 정부의 역할, 총기규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키스톤 파이프 건설 문제 등에 집중
 - 복지 공약은 건강보험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등 전통적인 복지 영역 공약은 많지 않음

공화당 입장	민주당 입장
과세 축소, 작은 정부, 낙태 반대, 국경 강화, 에너지 주권 확보, 국가 부채 증가 불가	정부 역할 강화, 상위 1%에 대한 종과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내 정착 지원, 환경 보호, 국방비 지출과 함께 미 국민들의 경제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국가 지출 증가

- 공화당 경선은 토론회,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등을 거치며 부시 등 다수의 후보가 사퇴

후보	트럼프	크루즈	루비오	케이식	카슨
누적대의원수**	302명	174명	104명	27명	7명
이전 경력	기업인	텍사스주 상원의원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오하이오 주지사	뇌수술 전문의
정책핵심	기업살리기	조세개혁	조세개혁	온정적 보수	의료개혁

**한국시간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정하는 대의원 '매직 넘버'는 각각 1237명, 2383명

- 도널드 트럼프, 법인세와 소득세 낮추고 보호무역 실시
 - 이민정책 : 불법체류자 추방, 미국출생시민권제도 폐지
 - 낙태에 제한적 찬성 : 성폭행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 시
 - 조세정책 : 대체에너지 투자와 환경보호 자금을 과감히 축소하고 절세를 장려, 기업 법인세율을 현 38%에서 15%로 인하,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폐지 등 기업살리기, 개인 소득세 인하로 기존 7개인 소득세율 구간을 4개로 단순화하고 특히 소득이 5만달러 미만인 가구는 소득세 면제(미국 가구의 50%가량이 소득세를 면제), 부자증세 중심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조세개혁을 주장

- 테드 크루즈, 공화당의 보수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
 - 개인 소득세 10%의 단일세를 적용, 현행 최고 35% 세율의 법인세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16%의 기업세를 물리게 하는 것으로 대체, 오바마 건강법 반대, 미국 국세청 폐지, IS에 대한 대공습 주장
- 민주당 경선은 현재 클린턴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

후보	클린턴	샌더스
누적 대의원수	917명	327명
이전 경력	전 국무장관	버만주 상원의원(무소속)
정책핵심	중서민층 살리기	소득불평등 해소

- 힐러리 클린턴의 “중서민층 살리기” 정책
 - 핵심 공약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 교육 기회 강화, 건강보험 부담 완화, 유급휴가 촉진, 대기업 이익공유제 유도, 노조 교섭력 강화, 부유층 증세 등
 - 최저임금제 : 시간 당 12달러로 인상
 - 약가규제안(약값 인하) : 오바마건강법의 확대 주장과 더불어 오리지널의약품 약가 인하, 안전 규제가 확실한 국가로부터의 저렴한 제네릭(복제약) 수입 확대 등 주장
 - 세제개혁 : 고소득층 추가세율 4%, 단기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 인상, 소기업 세금 감면
- 버니 샌더스, 미국을 복지국가로 만든다
 - 미국이 북유럽 선진국과 같은 복지 국가로 바뀌어야 하며, 건강 보험, 대학 등록금 무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선진 유럽 복지 국가와 유사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

〈버니 샌더스의 미국 경제 개혁 12단계 전략〉
 1) 인프라 투자확대 2) 신재생에너지 투자 3) 새로운 경제모델 개발(협동조합에 재정 지원)
 4) 전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5) 최저임금 상승(2배 이상) 6) 여성의 사회적 권리 보장(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7) 무역정책 개혁 8) 교육정책 개혁(초, 중, 고 공립학교 무상 급식 지원, 4년제(2년제) 공립대학 등록금 무상 제공) 9) 대형은행 해체 10) 국영 의료보험 체계 설립 11) 무상 의료검진 시스템 확대(노령층 의료보장(Medicare), 빈곤층 의료보호(Medicaid), 급식 프로그램의 예산 확대) 12) 조세개혁(소득별 누진세 시스템 도입)

- 미국 대선 주요 일정
 -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전국 50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며, 이후 전당대회를 거쳐 TV토론, 선거인단 투표의 과정을 통해 제45대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이 예정

날짜	주요 행사	내 용
2. 1.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	미국 대선 후보경선 첫 관문 : 당원들끼리 투표를 통해 자신의 선호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선출
2. 9.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해 대의원 선출
3. 1.	슈퍼화요일	13개 주에서 후보경선이 이뤄져서 사실상 이 날을 기점으로 양당의 대선 후보가 윤곽
7.18~21.	공화당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선 각 당의 대선후보가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
7. 25~28.	민주당 전당대회	
9.26, 10.9~19.	대선후보 공개 토론회	1·2·3차 공개 토론회, TV 생중계
11. 8.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표명한 선거인단에 투표***
12. 19.	대통령선거인단 투표	
'16.1.20.	45대 대통령 취임	

〈참고자료〉

신성원(2015). 2016년 미국 대선 동향 및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연주(2015). 미리보는 2016년 미국 대선-극과 극. NH투자증권.
 조연주·안기태(2016). 미리보는 2016년 미국대선-엇갈린 풍향계. NH투자증권.
 미 대선 주요일정. 첫 코커스부터 취임식 까지. 머니투데이 기사. 16.2.02.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088/newsview/20160202142816502#miniViewer>

***'승자독식제' 방식에 따라 한 주에서 한표라도 더 받은 쪽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